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이 자료는 11.6.(화) 10:40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총 9쪽
배포 일시	2018. 11. 6. (화)	담당부서	기무사 의혹 軍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	대령 전익수 (02-748-5480)	담당자	중령 박성완 (02-748-4740)

前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 개 요

○ '18. 7. 16. 출범한 「기무사의혹 軍 특별수사단」(이하 '軍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기간동안 기무사령부의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아래와 같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

* 기무사 보안연구소등총8회압수수색(21곳33개소), 총110여명에대한총129회소환조사 실시

* E-mail 등전자정보약600여만개파일(700GB) 분석

※ 별첨 「피고인·피의자별 처분사실 요지」 참조

□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

1 세월호 참사 당시 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 (前기무사의 세월호 TF 운용 목적) 기무사는 세월호참사이후 6. 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출구마련과 VIP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함

5. 10. BH 보고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방안' 中

여론 및 PI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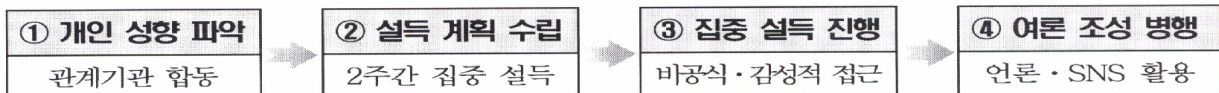
□ 고려사항

- ① 6·4 지방선거 以前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 ②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對정부 신뢰 제고 및 VIP 지지율 회복

- (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동기)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가족 개별성향(강경, 중도),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함

7. 19. BH 정보보고 '세월호 관련 정국전환 방안' 中

2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



① 실종자 가족 성향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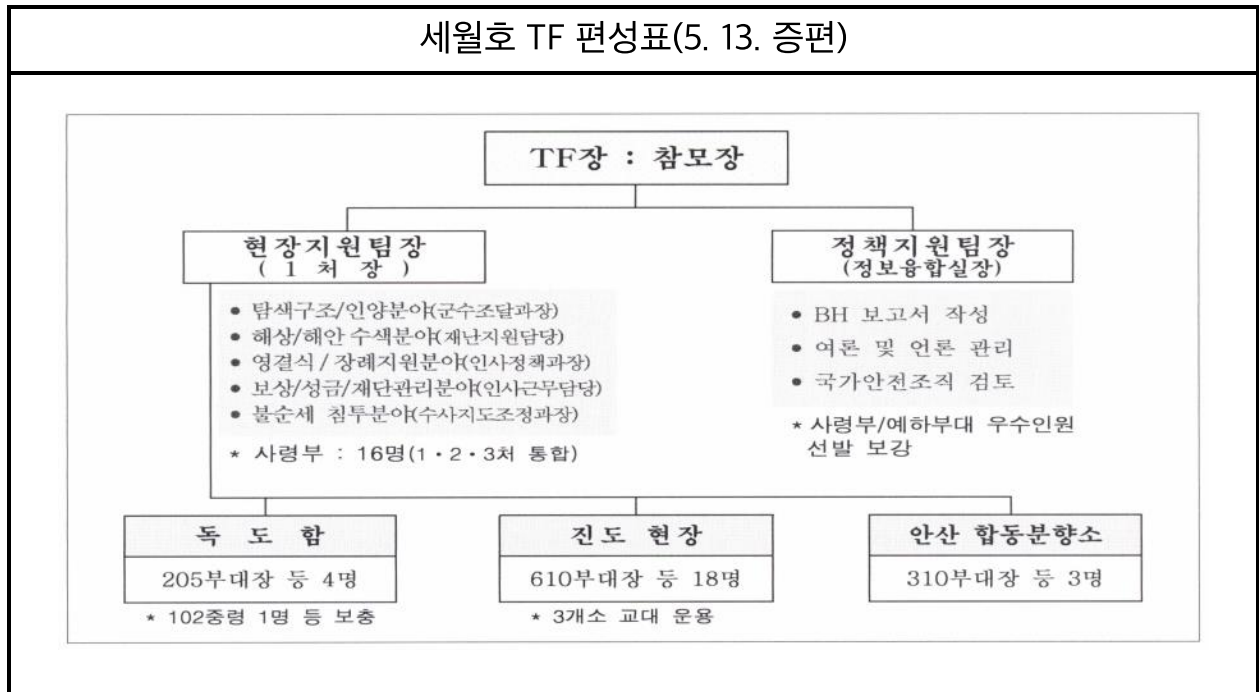
-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정부 조치를 수긍하나, 일부가 강경여론 주도
 - 대다수 온건·중도 성향 가족들은 주변 눈치를 보며 의견 개진을 주저

④ 국민적 여론 조성·압박 병행

-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부정적인 언론 보도·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 (BH 등에 대한 유가족 사찰보고)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BH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수회에 걸쳐 BH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 및 후속조치를 취함

- (세월호 관련 TF 운영을 통한 조직적 유가족 사찰) 기무사는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함.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함
⇒ 軍특수단 TF 현장지원팀장손00대령구속기소, 현장지원팀총괄박00대령불구속기소



6. 14. 사령부 ‘세월호 상황보고’ 中



- (610부대 실종자 가족 사찰) 6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등 활동지침을 시달하며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강성, 중도),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함
⇒ 軍 특수단, 당시 610부대장(대령) 소00 소장 구속기소

4. 21. '부대장님 지시사항입니다' 610부대원 이메일 中
○ 동정 파악 중점 -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 · 정부측 대책반과 실종자 가족 대표간 토의내용, 가족들 반향 · 특이언동 - 시신 입항현황 · 민간 잠수부들의 인터뷰 내용 및 가족대상 설명 내용 - 軍 관련 지원(임시안치소 운영) 사항간 문제요소 여부 - 반정부선동자 · 유언비어유포자 등 색출 ○ 물의방지 대책 -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 - 통화/문자 보고시 충성구호 등 軍 관련 용어사용 금지 - 문자 발송시는 현장을 이탈하여 송수신 후 즉시 삭제조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外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 우발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및 답변

- (310부대 생존학생·유가족 단체 등 사찰) 3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게 임무부여를 통해 안산시 등지에서 유가족 및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이 입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함
⇒ 軍 특수단, 당시 310부대장(대령) 김00 준장 구속기소

5. 29.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확인결과(310)' 中
가. 유가족 대표() ○ 과거 반정부적 활동 전력은 없으나 사회비판적 시각 포지 - () 운영 경력 및 ()에서 ()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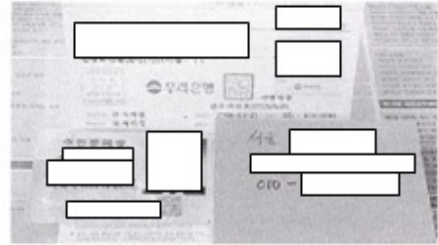
○

(0
0
0
부
대
정
보
0
0
반
유
가
족
,
사
이
버
사

7. 8.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상 공개정보 확인결과' 中

☐ ☐ 확인 결과(☐ 子)

- 네이버 닉네임 : ☐('12), ☐ (현재)
- 생년월일 : ☐ ☐ ☐ 세)
- 핸드폰 : 011 ☐ ('08), 010 ☐ ('10~'12)
- 대학교 : ☐ 대학교 ☐ 학부 ☐ 학번(☐)
- 거주지 : 서울특별시 ☐
- 군 복무 : 육군 ☐ 시단 ☐ 연대 ☐ 대대(☐ 초반 전역)
- 카카오톡 ID : ☐
- 네이버 ID : ☐
- 이메일 주소
 - ☐@naver.com('08~'11)
 - ☐@naver.com(현재)
 - ☐@nate.com(현재)
- 개인블로그
 - blog.naver.com/ ☐ (과거)
 - * 본인소개(긍정적이지만 다혈질, 웃을 잘 입음) 및 전공분야 글 등 총 10건 게재
 - blog.naver.com/ ☐ (현재)
 - * 아이폰 바탕화면 글(사진) 2건 게재
 - cyworld.com/ ☐
- 네이버 활동 카페
 - cafe.naver.com/ ☐ 매니아)
 - cafe.naver.com/ ☐ 장터)
 - cafe.naver.com/ ☐ 중고나라)
 - cafe.naver.com/ ☐ 업&스팩)
 - cafe.naver.com/ ☐ TWINS)
- 기타 사항
 - 대학시절 HSK(한어수평고시), 경제, 감정평가사, 재무회계 등을 공부함.
 - 중고거래카페 內 옷, 선글라스, 신발 등 패션 아이템과 자격증, 수강증 등 공부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거래하고 있음.
 - 중학교 때부터 엘지트윈스 팬이었음.



찰)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인 000부대 정보00반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
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 보
고함으로써 소위 '사이버 사찰'을 실시함

○ (쫄 부대 차원의 세월호 정국 관련 제언 수집) 기무사는 쫄 부대적으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하였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이 BH에 보고됨

* 사건 초기에는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 보고를 올리나, 인양장기화기 예상되자 수장/추모공원 조성으로 제언 방향 변경(6.7. 수장방안 BH 최초 보고)

○ (당시 기무부대원들이 제시한 정국 조기 전환방안)

-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구조사를 벌여 신원 확인 후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지급 협상할 필요
-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여 수색 및 인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필요
- 보수층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경제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경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이후 보수단체 주관 국민대상 여론조사 실시를 유도함

- 정부는 지속 수색을 하겠다는 표면적 입장을 취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함
- 세월호 선주·선장의 악행을 부각하여, 국민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대상 유도 (의인·악인 여론형성)

2 유병언 검거 TF 관련 불법감청 의혹

- (유병언 검거 TF의 조직과 활동) '14. 6.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경까지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를 위한 3처 TF를 구성하여 불법감청 활동을 비롯한 기무사 쏘부대 차원의 검거활동을 지휘·통제하고 보고 받음
- (BH 등에 대한 감청상황 보고) '14. 6. 이후 기무사는 수회에 걸쳐 BH 주요직위자 등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에 대해 '현 상황 관련 수색정찰활동'이라는 제목 하에 보고
 - * 감청장비 투입 개시 정보보고 건에 대해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는 BH 독려 내용의 문건 확인
- (TF 차원의 불법감청 모의 및 실행) '14. 6. 12. TF 지휘부 및 예하부대장은 회의를 통해 기동방탐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감청하자는 논의 후 방탐장비 투입을 보고하고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시작함
- (불법감청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강행) 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는 '무선통신 감청관련 위법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감청의 위법성을 보고함. 그러나 이 보고서는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감청활동은 위법하므로 이를 적법하게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해 전파환경 조사 명분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보고됨

⇒ 軍 특수단, 당시 TF장(대령) 기00 준장 불구속기소

6. 17.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방안' 中
☐ 기동 방탐활동의 위법성 여부 / 극복방안
○ 금번 件은 '통비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활동으로 違法
* 통비법 제 16조(벌칙)에 의거,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파법’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의거,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활동(전파환경조사 계획·결과 유지 등 증빙자료 준비)

* 전파환경조사 : 작전에 대비하여 전국 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내 설치·이전 등 적합성을 수시 조사

- 단, 감청내용 및 채록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필요

* 방탐장비내 감청내용未저장 / 채록자료는 사령부에 1부만 보관(종료시 파기)

- (대간첩 방탐·보안장비 및 인력을 이용한 감청활동) '14. 6. 13. ~ 유병언 사망 확인경까지 000·000부대는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은신 의심 지역에 인력 및 장비를 전개한 후 유병언 관련 통신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 무전통신부터 항만·공사장·영업소 등 개인간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채록하여 수백 쪽에 달하는 채록문을 TF에 보고함

* 000부대 6. 28. ~ 7. 21. 경까지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 2천여 건 /

000부대 6. 13. ~ 7. 12. 경까지 안성금수원 등지에서 1,300여 건 불법 감청(내부보고서 기준)

□ 수사의의 및 향후 조치

-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임. 軍 특수단은 기무사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軍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임

※ 보도자료 중 관련 혐의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엠바고 : 11.6.(화) 10:40

[별첨] 피고인·피의자별 처분사실 요지

계급/성명	당시 직책	혐의사실	처분 현황
소장 소00	610부대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실행지시	구속 기소
준장 김00	310부대장		
대령 손00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대령 박00	세월호TF 현장지원총괄		불구속 기소
준장 기00	유병언 검거 TF장	유병언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	불구속 기소
대령 000	000부대장		기소유예
대령 000	000부대장		
중령 000	000부대장		
중령 000	유병언 검거TF 총괄		